

쓰레기감량대책과 시민단체의 역할

<중구의제 21> 작업에 착수한지 한달음

6.23-24 중구 환경특별위원회 4차 회의록 (리우+5) → 의제 21 추진상황 검토를 토대로 하는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to Review and Appraise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발령 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I. <지방의제 21>과 쓰레기관리문제

지난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날을 기해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과 녹색서울 만들기의 희망을 가지고 시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서울의제 21>을 작성하여 서울시민과 지구시민에게 선포한바 있다. 여기에는 8개분야(대기, 물, 폐기물, 생태, 교통, 도시계획, 문화, 복지)의 30개의 개선목표와 365개의 행동계획이 담겨있다. 이 중 폐기물 분야는 3개의 개선목표와 37개의 행동계획(시민 12, 기업 9, 정부 16)을 차지하고 있다.

자생가능한 지구환경이어야
<지방의제 21>이란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채택된 행동계획인 <의제21 -Agenda 21>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수립한 실천계획이며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청사진이다.

현재 전세계 64개국의 1,8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의 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3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수립을 완료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서도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발표하였거나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중구도 금번 환경포럼을 출발점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의 큰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중구 의제 21>의 수립과 실천은 거대도시 서울의 중심에서의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중구 의제 21>을 만들기 위한 이 포럼의 내용에서 특이한 점은 중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행동방안모색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의 하나의 과제가 쓰레기 관리의 문제이다. 이 과제는 <의제 21>에서 보면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지구환경과 쾌적한 지역사회 만들기에서 보면 화급을 요하는 골칫거리의 하나여서 우선 과제가 되고도 남는다.

발제자에게 주어진 제목은 <쓰레기감량대책과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이 주제는 이미 쓰레기관리문제와 해결책모색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어서 발제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감량과 시민단체 참여

<중구 의제 21>은 그 수립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느냐이다. 이번 환경포럼을 통해 과제에 따른 실천방안모색과 함께 지역사회구성원간의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중구의 쓰레기관리현황과 문제점

중구의 '97년도 주요현황에서 보면 중구는 서울시의 기초자치체중에서 지역의 면적과 세대수(50,141) 그리고 인구수(134,839 - 감소추세)가 제일 작은 자치체이다(96. 97년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1). 재정자립도는 96.53%로서 서울의 자치체중에서 제일 높은 강남구의 96.62%와 간발의 차이로 2위(3위 서초구 93.52%)이다.

중구는 주요기관 및 시설들(교육기관 41, 공공기관 80, 언론기관 9, 금융기관 240, 종교시설 99, 관광호텔 26, 시장상가 48, 공연장 21, 병·의원 422 등)의 밀집지역이다. 이런 현상은 쓰레기발생량과 성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산업체로서는 출판 및 인쇄업체(업체 590개소 중 480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폐수와 소음이 공해요인이 되고 있다.

중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567t(일반 510, 연탄재 8, 재활용 49)으로서 1인 1일 배출량은 3.99kg(일반 3.8, 연탄재 0.07, 재활용 0.12)이다. 매일 수거처리하는 폐기물 567t(구 126.6, 대행 440.4)중 518t은 매립 그리고 49t은 재활용처리하고 있다. (매립비 비싼것을 재활용하는 것인데 일반인) 중구에서 재활용 10% 미만

1996년도의 서울시민 1인당 1일 배출량 1.3kg(한국 평균치 1.45('95) 독일 0.9 일본 1.0)에 비하면 중구구민의 1인 1일 배출량 3.99kg은 엄청나게 높은 배출량이다. 사업장쓰레기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구(종로 62, 강남 60, 영등포 52 -'96.5)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과민하는 분장이 적음이라. 생활량, 직장, 가량, 재활용 가능성 등)

중구의 청소과 직원현황은 정원 70명과 현원 82명이며 청소인력은 566명(운전원 110, 미화원 446, 정비원 10)이며 그 중 4개동의 쓰레기 수거처리·가로·공중변소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390명(운전 51, 미화원 335, 정비 4)은 구 직영 그리고 14개동을 담당하고 있는 176명(운전 59, 미화 111, 정비 6)은 대행업체 인력이다.

'96년도의 청소관련예산은 수입 31.1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8.8, 다량배출폐기물 매립처리비 12.3억원 등)과 지출 212.4억원 (미화원 인건비 74.1, 자원재활용처리장 건립비 25.6, 매립지조성공사비(70%) 36.8,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23.4, 쓰레기봉투제작비 6.5, 장비구입비 14.7, 기타운영비 31.3)으로서 청소행정재정자립도는 14.6%이다. '96년도 중구청 전체예산 133,417백만원에서 청소관련예산(212.4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15.92%이며 청소관련예산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4.89%이다.

서울시자치구전체의 재정 중 청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18.6%로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합산해서 산정하면 12.8%(3,460억)이다. 이 중 중구청소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14%이다. 향후 쓰레기가 감량되더라도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처리비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97년도 청소과의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쓰레기수거체계개선책(사업장생활폐기물 종량제 실시, 대형폐기물배출절차간소화, 공휴일청소당직제 실시, 청소민원의 Fax처리)을 비롯한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재활용품거점수거제도입, 재활용센터개설운영, 재활용시범학교확대 지원)과 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책 등이 마련되어 있다. 기타추진계획으로서 환경오염감시할

1)'97 중구 주요현황 51쪽. 청소과 '97주요업무계획 1일 평균 543t(일반 499, 연탄 1, 재활용 43).

동(공익근무요원쓰레기무단투기단속활동, 신고주민에 대한 보상제 실시-예산 1만×300건) 및 교육홍보활동(1일청소교실운영-720만원 대주민청소행정홍보-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전개, 공동주택지에 음식쓰레기감량화기제설치-2000만원×10대)이 현재의 중구의 쓰레기관리정책의 주요계획이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중구의 쓰레기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총평: 중구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통상형이다.

①중구의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동별, 발생원별, 성상별 등의 발생량에 따른 수거체계, 처리체계와 재활용품의 품목별수집, 처리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타 자치구의 소각 및 매립 등의 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구의 특수성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처리정책이 쓰레기행정의 일반관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③감량대책에 관심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현 감량과 재활용정책이 시설설치위주로 되어 있다. ④발생원 감량과 재활용활성화에 필수적인 구민과 구민조직의 참여유도책(기구구성, 행정 및 예산지원 등)이 없다. ⑤홍보와 교육활동이 미약하다. ⑥감량과 재활용활동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불편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⑦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 감량 및 재활용촉진관련예산의 별도제시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로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⑧민간기구 및 홍보, 교육활동 재정지원이 없다. ⑨쓰레기관리관련 안내, 상담 및 정보를 담당하는 (상설전용전화시설 등) 장치가 없다. ⑩쓰레기행정을 행정부의 대국민 서비스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민도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⑪중구의 생활환경을 감시하는 의회에 여성위원이 없다.

*1일청소교실운영
현상배정동년
교육홍보
가계용기*

III. 획기적인 폐기물관리정책전환의 필요성과 감량대책

인간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결과는 대량폐기로 이어진다. 쓰고 버리는 소비풍조에 의해 쏟아져나온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쓰레기처리문제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닌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난제로 부상하였다.

오늘의 쓰레기문제는 배출량이 많은데도 문제가 있지만 배출된 쓰레기를 쉽게 자연으로 환원시킬 수 없도록 그 질이 복잡하고 위해성이 높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실은 원천적으로 쓰레기의 배출을 억제해야 하고 배출된 쓰레기는 적정처리를 해야만 하는 부담(고도의 기술, 전문인력, 처리시설공간, 막대한 예산)을 자치체에게 부과하고 있다. 6.27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자기지역의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하는 원칙에 의해 중구에서도 폐기물처리의 근본적이며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통합관리원칙은 ①원천감량(재사용 포함) ②재활용(재자원화, 퇴비화, 사료화 포함) ③소각(중간처리방안으로 전력생산 포함) ④매립(위생적으로 최종처리)이다. 이러한 원칙은 지역의 폐기물배출량과 성상 그리고 처리시설 등의 지역여건에 따라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중구의 실정으로는 원천감량과 재활용촉진에 주력해야 함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감량·재활용의 비중이 높아야

*현행처럼 재활용에 의존하는 것은 안된다
인건비, 운영비, 처리비
회계이용비
시설이용비
생태적 소원 - 환경운동의 위기*

*사후처리 → 처리비용
Haid → 2001
정리 → 구민서비스*

*재활용:
2000년 12월
쓰레기처리비용절감
이제부터*

*감량정책: 정책적 투입과 운영 정책
쓰레기대량배출을 막는 것
↓
쓰레기 수거량 감소 (정량제, 용량제한제)*

〈서울의제 21〉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알뜰한 서울을 만들기로 한 실천지표에서 보면 1996년도 하루 1인당 쓰레기 배출량 1.3kg을 1998년도에는 1.17kg으로 줄이고 2002년에는 0.9kg, 2007년도에는 0.78kg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재활용의 비율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996년 29.5%에서 1998년도까지 32%로 높이고 2002년에는 35%로 그리고 2007년도에는 40%로 끌어올리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서울의 전체 폐기물량의 30.3%(중구 35%)에 이르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1996년도의 0.39kg에서 1998년에는 0.35kg으로 2002년에는 0.20kg으로 줄인 후 2007년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목표치에 따르면 현재 하루 1인 배출량이 서울시민 평균 1.3kg(재활용 29.5%)인데 비해 3.99kg(재활용 0.12%)인 중구로서는 쓰레기관리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그것은 재삼 강조하지만 감량화대책과 재활용활성화방안을 대폭 수정·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중구의 발생된 쓰레기의 사후관리대책에서 과감하게 사전예방대책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 ① 대형사업장의 쓰레기감량대책강화:
② 음식물쓰레기
③ 생활쓰레기(노이영제 등)

중구의 감량화대책의 우선과제는 쓰레기배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의 쓰레기배출을 감량하는 것이다.

일본 동경도가 시행하고 있는 〈재이용·자원화계획서 겸 실적보고서〉 제출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형사업장(1만㎡이상 1,961동, 3천㎡이상 1만㎡이하 6,411동 등 합계 8,372동)에 대한 폐기물배출감량화 촉진방안의 하나로 일정규모이상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사업용건축물, 사무소빌딩, 백화점, 공장, 병원, 학교, 극장, 식당, 관공서 등)에게 해마다 폐기물배출과 처리에 대한 자가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 동경도는 1993년 4월부터 〈동경도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조례〉에 그 시행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고서양식 취득 가능)

최근 서울시에서 〈백화점등 대형판매소의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위한 실적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품의 포장재의 재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원천감량에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업소자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감량과 재활용활성화는 촉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른 점이다.

②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활성화대책:

생활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양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수거운반과정, 소각 그리고 매립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처리방법에 따라서는 전량 자원화가 가능한 자원이다.

환경부가 지난 5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 해놓고 있는 폐기물시행규칙의 개정안의 내용은 2005년부터 모든 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돼 퇴비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의무대상업체를 종전 하루식사인원 2000명 이상 급식소와 객석면적 660㎡이상에서 100명 이상과 100㎡ 이상의 음식점, 시장, 관광숙박업소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시책에 따라 서울시내의 감량의무화대상업소를 현재의 186곳에서 8,100 곳으로 늘려야한다. 이들 대상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건조, 발효 등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해야한다. 서울시는 또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고속발효기와 건조기, 소멸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구청 청소과의 '97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35%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 하는 것으로서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기계(2000만원×10대=2억원)를 구입하여 공동 주택 등에 시범 설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형음식점에게는 감량화기계를 설치하도록 지도 하고 설치자금(식품진흥기금에서)을 융자하고 있다. 한편 전 가구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 단간소화 및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하고 있다. (예산배정 없음)

이상과 같은 정부시책에서의 문제는 **규제정책인** 경우 늘어나는 규제대상을 관리 감독하 는 행정력강화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기계설치를 통한 처리방안**에는 1994년 9월에 시행한바 있는 대형급식소의 발효기 설치 의무화시행 실패의 원인(기술미흡, 관리소홀, 이차오염발생 등)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다 개발된 **하드웨어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방안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자와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는 **선별원칙**(사료 이물질 제거, 퇴비화 염분제거 등)에 따른 분리배출을 하게 함으로써 자원화해야한다. 그렇게 하는 방안에는 국내외에 다양한 성공사례들이 있다. ①노원구의 아파트단지의 주부조직의 **생쓰레기퇴비화운동**(조리전 채소찌꺼기, 과일껍질 등 염분이 없는 쓰레기 퇴비화-한국여성민우회 동북지회 999-9221) ②일본자치체들의 **발효제활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와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 ③UNEP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집단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녹색생활운동인 에코가족운동**(한국사회교육원 744-3964) 등이 그것들이다.

18개 시도
245개 시군구
15/17

이 사업에 있어서의 자치체의 역할은 도·농의 연계, 퇴비의 사용처 발굴, 교육·홍보활동 전개, 활동거점제공(동사무소 등),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네트워크구축, **예산과 행정지원** 등이다.

처리비용 부담은

③다아나바운동 확대전개:

녹색생활운동

이것은 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로쓰는 운동이다. 쓰레기감량의 목적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지구자원을 보전하고 순환사회를 만드는 일에 기여한다. 일단 생산·판매된 물품은 그 기능을 다하기까지 폐기를 자제하는 것이다.

서울시 18개 시군구
105개 시군구
주부조직
소규모공동
18개 시도
347개 시
2,222개 시
시각관계
Model 7410
동관리 1~2개 시

성호제

비주류인

우리 나라에서도 자치체마다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조직들에 의해 **창의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중구 필동 재활용협의회가 전개하고 있는 <쓰찾사>운동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운동은 쓰레기더미에서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동네의 무의탁 노인과 불우소년 돕기, 고아원 돌보기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사회의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의류은행운영, 물품의 공동구입 및 임대사업, 벼룩시장운영, 중고품가게운영, 물품교환소운영, 폐유를 이용한 비누만들기, 환경마크상품구매촉진**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등은 행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IV. 획기적인 폐기물 관리책으로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중구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폐기물관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회구성원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행정의 시민참여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6.27 지방자치선거 이후 많은 자치체들이 행정을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행정부의 각 부서에 민간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자문기구가 아닌 동반자적 참여기구로서이다(예: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실천이 따라주어야 하는 환경행정에서의 지역주민과 주민단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환경행정의 효율성이란 정책결정자의 선언이나 정부의 규제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과파에 있어서 가해자이며 피해자 그리고 감시자인 지역사회주민 개개인의 환경의식과 환경친화적인 실천 없이 환경보전의 효율은 성취될 수 없다. 특히 쓰레기 정책중에서도 **원천감량과 재활용사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의 환경법에서 주민참여를 추진하는 새로운 행정절차가 도입되어 카터대통령 당시에는 환경운동가를 연방정부 행정요원으로 등용하는 등 환경행정에의 주민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32%의 주민이 여러 형태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행정집행은 특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환경정책의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행정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감축하고 있어서이다. 환경행정에의 주민의 참여는 환경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문제해결에 뒤따르고 있는 분쟁해결에도 좋은 해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에의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를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세계의 도시들은 물질적이며 외형적이고 양적인 성장위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지역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잃었으며 지역적인 삶의 문화의 토대를 붕괴시켜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시켰다. 사회구성원의 무명성, 소속감부족, 고향의식상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사회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행정의 의사결정을 비롯한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우리의 경우 새로운 시도로서 관주도의 행정관행에 젖어 있는 공무원에게 있어서나 정부가 모든 것을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에게 있어서나 생소하다. 그러나 획기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대안인 만큼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하므로 환경행정(쓰레기감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참여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은 ①개개인인 지역주민을 집단으로 묶어내고 ②지역사회여론을 집대성하며 ③대정부, 대기업과의 대화의 창구가 되고 ④지역주민이 지역사회 활동과 행정에 참여하게 하며 ⑤환경교육에 앞장서고 ⑥입법활동도 전개하고 ⑦행정을 모니터링하며 ⑧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행정이 정착되어있는 노르웨이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없는 노르웨이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정도이다.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이루고 있는 사례이다.

서울시의회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의 자율적인 시정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듯이 중구에서도 **주민의 구정참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V. 중구청에의 제언

중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나 환경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일반적인 제의는 가능하다고 여겨 몇 가지 제시한다. (중구환경선언, 중구환경기본조례 제정선포한 것으로 전제, 중구의제 21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① 중구의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소각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타자치체와는 달리 중구의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은 **원천감량과 재활용사업계획**을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과감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② <중구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적정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은 상위법에서 자치체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중구의 특수성 해결을 도모하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은 **감량화와 재활용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는 조례**로서 그 내용에는 (1)선언적 내용 (2)감량화·재활용·적정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와 구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퇴비화에 관한 사항 (4)사업자의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5)유해, 대형폐기물 등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6)**폐기물관리계획과 평가보고서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량화 · 재활용 · 적정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폐기물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의 소유자,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일반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시의원, 기업계 및 환경산업계 대표자, 시, 구 폐기물담당 공무원, 지역사회 폐기물관련 주부조직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폐기물관리의 정책수립, 집행, 평가과정을 심의하며 대안제시도 하게 한다.

④ 녹색중구구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구민과 구민단체를 비롯한 중구의 구성원 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구의 환경행정(쓰레기감량, 재활용사업)을 범구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중구의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중구에도 유사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구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이미 있는 위원회의 운영방침을 갱신하는 것이다. 갱신내용의 초점은 위원회운영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환경행정을 분담하는 기능이 부여되며 위원회는 중구의 환경행정을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실무진과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⑤ 중구의 폐기물관리 및 환경보전과제는 실명제로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기구, 지역사회 민간단체, 경제관련기구, 교육기관, 전문기구, 종교기관, 사업체 등 중구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네트워크화한다. 중구내의 환경과제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과제를 실명제로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관리 · 보전하는 것이 행정보완은 물론 과제수행을 실효있게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에게 위임해서 구축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들의 구시책점검단, 학교순찰단, 자원경찰대 등의 설치 · 운영방식을 참고한다)

⑥ 환경교육 및 실천활동을 위한 동단위거점을 마련한다.

구민개개인의 실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쓰레기관리행정에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교육의 내용은 환경행정예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되어야한다. 구민모두가 가해자, 피해자, 감시자로서의 1인3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서울시민들은 환경교육과 실천활동(쓰레기감량 등)의 거점으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동사무소를 지역사회의 환경문화센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렵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과학화 등에 힘입어 동회의 업무량과 내용이 변하고 있어서 가능하다. 이미 타 자치체에서는 복지센터, 의료서비스센터, 만남의 장, 정보문화센터 등으로 동사무소가 개편운영되고 있다.

⑦쓰레기관리관련 상설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한다.

시민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민원창구의 확대·개선 및 다양한 창구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주민의 의견반영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주민감사청구권, 옴부즈만제도, 주민발언대 마련, 주민투표,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 구민토론회 등의 활용으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추가해서 **쓰레기관리관련 상설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한다.

⑧환경행정에 지역사회의 주부인력을 동원한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에서도 앞서있다고 하는 것은 조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환경보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부들이다. 이것은 주부들이 자신의 지역환경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주부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가능하다. **기초자치구의 행정은 생활행정**이라는 점에서 주부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그들의 행정참여를 통해서 수렴해야 한다.

이들을 지도자로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단위를 비롯 지역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기본단위인 가정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여러 부문의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권장한다.

VI. 맺는 말

〈중구 의제 21〉 수립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작업을 **지역사회구성원 전원의 협력**으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행동계획의 실천을 보장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서 성공적인 성취를 기대하게 한다.

〈중구 의제 21〉은 중구의 장·중·단기 환경정책과 행정의 청사진으로서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살맛 나는 중구를 중구구민 스스로가 만드는 것**을 통해서 중구를 **공동체사회**로 그리고 구민에게 **고향을 되찾아주고** 〈중구 한 가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살맛 나는 중구의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량화·재활용화 운동을 구민의 집합체인 시민단체들이 앞장서며 자치체는 그들과의 협력으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출발점**이 오늘의 포럼을 기해 마련되기를 바란다.